

“합참 ‘폭발음 청취 보고’ 삭제 후 발표”

■감사원 ‘천안함 감사’ 결과 발표

北 잠수함 침투 대비대세 소홀...대응조치 안해

‘어뢰 피격 판단’ 보고 않고 발생 시각도 조작

감사원은 10일 중간 발표한 ‘천안함 침몰사건 대응 실태’ 감사 결과를 통해 전투예방 및 준비태세, 상황보고, 전파 등에서 문 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 결과 주요 내용.

◇ 北 잠수함(정) 침투·공격 대비 태세 소홀=군은 작년 11월 10일 대청해전 이후 실시된 전술토의 등을 통해 북한이 기존 침 투방식과 달리 잠수함(정)을 이용, 서북해역에서 우리 함정을 은밀하게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예상했다. 하지만 제2함 대대사령부는 백령도 근해에 잠수함 대응 능력이 부족한 천안함을 배치한 채 대잠능력 강화 등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합 참과 해군작전사령부는 2함대의 대잠능력 강화조치 이행 여부 확인을 소홀히 하는 등 전투준비태세를 소홀히 했다. 특히 제2함 대 등은 사건발생 수일 전부터 ‘北 잠수정 관련 정보’를 전달받고 도 적절한 대응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상황 보고 및 전파업무 부실=2함대는 밤 9시28분께 천안함 으로부터 사건 발생 보고를 받고서도 해군작전사령부에는 3분 후에 보고하고 합참에는 9시45분에 보고했다.

또 9시53분 천안함으로부터 침몰 원인이 ‘어뢰 피격으로 판단 된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 사실을 합참, 해군작전사령부 등 상급 기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초기 대처에 혼선을 초래했다. 밤 11시께 속초함이 추격·발표한 해상 표적물의 실체에 대해 전술 지휘통제체계(KNTDS), 열상감시장비(TOD), 레이더사이트 영상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정밀 조사했으나 사체 등 실체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웠다.

당초 속초함은 “북 신형 반잠수정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으 나 2함대는 속초함의 보고와 달리 상부에 ‘사태’로 보고하도록 지시, 최초 상황보고를 중간부대에서 추경·가감 등을 하지 못하 도록 하는 보고지침을 위반했다.

합참은 지휘통제실에서 2함대로부터 사건당일 오후 9시45분 게 침몰 상황을 보고받고도 합참의장(밤 10시11분)과 국방부장 관(밤 10시14분)에게 능동보고했다. 또 긴급 상황을 전파해야 하는 유관기관 중 상당수 기관에 상황을 전파하지 않았다.

합참은 사건당일 해군작전사령부로부터 사건발생시각과 폭 발음 청취 등 외부공격에 의한 사고 가능성을 보고받았고도 사건



발생시각을 밤 9시45분으로 임의로 수정하고 폭발음 청취 등을 삭제한 채 장관 등에게 보고하고 대외에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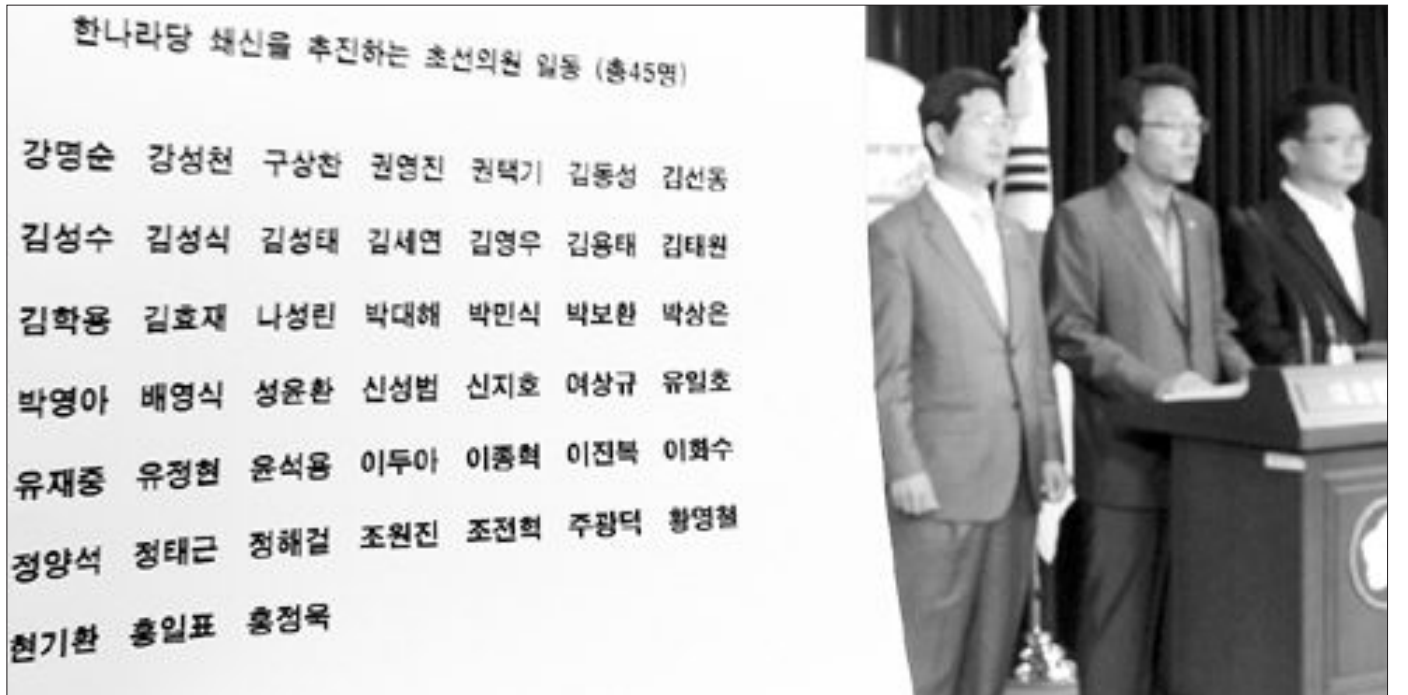
◇ 상황 발생 후 위기대응 조치 부실=국방부는 위기상황시 관 계 규정에 따라 ‘위기관리반’을 소집해야 하는데도 소집하지 않았고 ‘위기관리반’을 소집한 것처럼 장관 등에게 보고했다. 합참 등 일부 관계 부대는 ‘위기조치반’을 소집하지 않았고 비상상황 시 의무적으로 조치해야 할 전투대응태세를 이행하지 않았다.

◇ 언론발표·군시기밀 관리 부적정=국방부와 합참은 사건발 생시각 등에 대한 국민 의혹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TOD 동영상 을 공개하면서 동영상이 밤 9시23분58초(실제시각 밤 9시25분 38초)부터 녹화된 걸 알면서도 밤 9시33분28초(실제시각 밤 9 시35분8초) 이후의 영상만 편집해 공개했다.

지난 3월27일 오전 7시40분 국가위기상황센터로부터 사건발 생시각 등을 알 수 있는 ‘지질자원연구원’ 지진과 자료를 받고도 당시 혼선이 있었던 사건발생시각에 대한 적극적인 수정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 합참의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자 료는 군사기밀인데도 이에 대한 보안조치를 소홀히 해 외부에 유출, 혼란 등을 야기했다.

또 보도자료 배포시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거나 소홀히 해 주요 무기 배치 현황 등 군사기밀 자료 다수가 외부에 유출 됐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전문(全文)에 군의 핵심적인 군사작전 지침, 계획, 서북해역 함정보유·배치 현황, 군의 무기성능 및 한 계 등 군사기밀 사항이 다수 포함돼 있어 국가안보 및 군사기밀 관리 등에 저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감사 결과를 공개했 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당 쇄신문제와 관련, 한나라당 소장파가 ‘우리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한나라당 초선의원 전원에게 돌린 가운데 10일 국회 정론관 에서 한나라당 김학용·김성식·정대근 의원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나라 소장파 ‘쇄신 연판장’ 논란 증폭

당·정·청 전면개편 등 6개항 요구...최고위 비대위 구성

한나라당 초선 소장파 의원들이 10일 당· 정·청의 조속한 전면개편을 요구하는 연판 장을 돌리고 나서 당내 쇄신 논란이 확산일 로를 치닫고 있다.

당초 비대위가 이날 구성되면서 쇄신파동 도 소강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었지만 소장 감경과가 집단행동에 들어가면서 여 권 수뇌부의 입장 정리가 주목된다. 다만 쇄 신방법을 두고 조재선 내부에 온건 세력도 존재해 쇄신과 사이에 갈등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날 연판장 작입은 김성식·정대근·황영 철 의원 등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은 청와대 참모진 개편, 세종시와 4대강 사업 재검토 등도 직접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우리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초선 의원 전원에게 돌렸으며, 30~40명의 의원 을 규합해 ‘초선 쇄신추진모임’을 구성한다 는 방침이다.

이들은 연판장에서 “이번 6·2 지방선거에 서 나타난 민심을 한나라당과 청와대, 정부 의 일방적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강력한 경고로 받아들인다”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 의 불철저함과 무기력을 반성하고 한나라당 의 쇄신과 이명박 정부의 성공을 위해 끝까 지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또 일방통행식 국정운영 수정, 세종시와 4 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요구 적극 수렴, 전당 대회를 통한 새로운 리더십 창출, 당 화합을 위한 구체적 실천, 청와대 참모진 개편, 친서

민정책 적극 개발 등 6개항을 촉구했다.

한편, 최고위원회는 이날 오전 마지막 회 의를 열어 초선 의원 3명과 재선 의원 2명을 포함해 14명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를 인선하고 명단을 발표했다. 비상대책위원장은 김무성 원내대표가 맡았으며, 비대위원 으로는 고종길 정책위의장, 6선의 홍사덕 의 원, 3선의 이병석·안경률·김학송 의원이 각 각 포함됐다.

이와 함께 초선에서는 김선동 안경환 김 영우 의원이, 재선에서는 진영, 김기현 의원 이 각각 포함됐다. 여성으로는 4선의 김영선 의원이 위원으로 활동하게 됐다.

호남과 충청 뒤편으로는 6·2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과 대전시장 후보로 각각 나섰던 정용화 전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과 박성효 전 대전시장이 포함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안보리 ‘천안함 논의’ 속도 낼까

이란 제재 결의안 통과로 초점 부상...중·러 태도가 관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천안함 사건에 대한 본격 논의에 급명간 착수할 것으로 보 인다.

안보리가 지난 9일 오후(현지시각)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이제 안보리 논의의 초점이 천안함으로 옮겨 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유엔의 한 외교관은 이날 “그동안 안보리 는 이란 문제 때문에 사실상 다른 안건은 거 의 다루질 못했다”면서 “이란 제재 결의가 통과된 만큼 다음 우선순위는 천안함 문제 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천안함 사태 관련 민·군 합동조사단 이 14일께 유엔본부에서 안보리 15개 이사

국을 상대로 비공개 브리핑을 가질 예정이 어서 논의 진전에 획기적 모멘텀을 제공할 지 주목된다.

그러나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이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거부권을 갖고 있 는 두 나라가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 안보 리 논의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천안 함 침몰 원인과 관련해 자체 조사를 벌인 러 시아가 관련 결과 보고서를 내달게 최종적 으로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러시아의 발표가 나올 때까지 최종 결론이 유보될 가 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합뉴스

與 권력쟁탈전? 鄭총리 MB 독대 불발...인적개편 건의 무산

정운찬 국무총리가 전날 청와대 주례 보고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여권 인적 쇄신에 대한 건의를 하려다 불발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놓고 여권 내 권력투쟁 조짐이 일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와 총리실 모두 보도 내용을 부 인, 일단 ‘해프닝’으로 일단락됐지만 발설 의 진위지가 진이(진 이명박) 측근인사로 알려지고 일각에서는 배후설까지 등장하 면서 현 청와대 참모진과 인적쇄신을 주 장하는 당정 핵심 인사들 간에 권력 쟁탈 전이 시작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대두되 고 있다.

총리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에 대해 의견을 밝히려 했다는 것 자체가 이 례적일 뿐 아니라 여당이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상황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도전 내지는 ‘마이웨이’식 독자적 정치행보로 비쳐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일은 단순 히 해프닝으로 넘기기에는 사안이 중대 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통령과 총리가 정국 운영 방 향에 있어 서로 다른 견해를 노출하고 나야 가 갈등 요소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자칫 대통령의 권력누수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여권 내부에 큰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여권에서는 한때 총리 주변에서 이 같 은 정보를 흘린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들 었지만 진원지는 진이 측근 출신의 고위 인사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 총리가 준비한 국정쇄신안은 ‘선 (先) 청와대 개편, 후(後) 대폭 개각’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개각에는 인사검 증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지만 청와대 참 모진은 이미 정경직 대통령실장이 사의 를 표한 만큼 먼저 교체하는 게 정국 수습 에 도움이 될 것이라 내용이었다고 덧붙 였다는 후문이다.

연합뉴스

광주교육대학교 Challenge !! 방과후학교 전문교사 양성과정. Includes logo, title, and a list of course details.